

지역 맞춤형 재택관리지원 눈길

무주군, 군민 39% 60세 이상 고령자…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전체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이 시행이 되고 10일부터는 확진자 의료체계도 셀프 재택치료 중심으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지침도 달라진 가운데 무주군이 지역 현실과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재택관리지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에서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요양시설입소자 등)에 대한 지원과 일반관리군에 대한 행정 상담만 하면 된다.

의료 상담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전북 3곳, 무주·남원·의원)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무주군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전체를 지원한다. 건강모니터링(하루 2번, 체온 및

신체증상 이상 유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격리기간과 해제일, 외래 진료센터, 동네병원(의원·비대면) 안내(문자)와 기초 의료상담, 약 처방, 그리고 약을 지어 전달해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한다.

또 일반 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의료카드(체온계, 혈압계, 소독약 등)와 식료품(즉석요리류)을 지원하고 감염예방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확인 등 전화역학조사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우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 군민의 39%를 차지하다 보니 이에 맞는 재택관리지원이 필요했다”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취약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원에 정성을 쏟는 등 원칙

까지 이들의 건강과 인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으로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시설사업소 등이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과 안심숙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주고 약도 타다 주더라”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큰 만큼 어서 원치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월 14일 현재 무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80명으로 이중 1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결의

무주군의회, 재상정 촉구 결의안 의원 만장일치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주민과 무주군의 입장에서 배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및 재상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부정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이 청구한 88억 7100만원 중 단 29억 900만원만 인정하고 39명의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 어처구니 없는 배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제안하고 대표님과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원인행위자이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단 25%만 배상의무를 지고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11%씩 배상하도록 했다. 용담댐 대량방류로 지자체의 행정재난·행정적 손실을 아끼해 무주군이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피해를 입은 장소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어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각자도생이라는 얘기”라며 원인행위가 명확한 만큼 구역에 상관없이 일반 피해주민과 공동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이 무주군 피해주민들의 재기를 빙하고 무주군의 지원의지를 꺾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전했다. 이어 ▲중앙환경부정조정위가 무주군에 배상책임을 지운 결정을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 일반 피해주민과 공동하게 배상할 것 ▲무주군이 지방·소하천 위임사무를 맡은 이유로 받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할 것 ▲무주군이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14일 관내 식품업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익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회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를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며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총액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영업주의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군 민원봉사과·위생팀을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자연·문화유산 소개 메타버스 구축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



무주군 쇼핑몰인 ‘진안고원몰’과 유선접수로 동시에 진행되며, 3월 11일 15시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0% 추가 할인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홍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권 고로쇠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축제를 통해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로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온라인 판매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맛보고 즐기셨으면 기쁘겠다”고 밝혔다.

문은영 부의장

은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청정무주 반딧불 메타버스로 극복하자’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

해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의장은 “무주군은 반딧불이와 그 먹이의 서식지 삼공리 반송, 오산리 구상화강 펜타암과 낙화봉이, 적상산사고·봉안행렬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은영 부의장은 “메타버스의 주요 활용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가상체험을 완료한 사람이 실제로 무주를 방문했을 때 헤택을 제공하고 유튜브 사계절 홍보영상과 연계해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장 해임 규칙 개정 요구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이장을 판결 전에 비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미을이장 해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장 해임은 읍·면장 권한이다. 그런데 현행 규칙을 보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장을 해임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무주군의원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미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에 읍·면

장이 해당리의 의견을 청취하여 미을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해연 위원장은 “관찰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다. 기소되어 해임된 이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장과 미을 공금을 횡령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징형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이 인사법령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업무가 기중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소상공인 대상 10만원 방역 물품비 지원

장수군이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된다.

군은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내용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시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홈페이지(<http://haver.m/Gp4EP7m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고편호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장수군이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영수 군수는 14일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추진 상황을 살피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겨울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영수 군수는 14일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각 실과별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관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보

기동·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자재의 적정성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과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사장 주변 현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장수=고편호 기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말하다

진안군, 군민설명회 열고 주민 참여·지역사업 연계 도모

진안군은 14일 마이산 에코파크에서 군 관계자를 비롯해 주민·지역 산학 협력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군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군민설명회는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신선했던 사업을 비롯해 농촌 기관·단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안헬스푸드 사업을 포함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돋고, 향후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진안군의 독창적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계획했던 용역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직접 설명에 나서 설명회를 활발하게 이끌었다.

군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 등을 확정하고, 올해 약 22억원을 투입해 진안헬스푸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동기관센터 건립을 통해 진안군에 대한 행정·문화·사회·환경 분야의 특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경제공동체 발굴 및 육성으로 실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